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 인력 충원!

공공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의
문제점을 비판하다

4~5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교대제 개악

5면

생색 내기에 그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8면

특수고용 노동자
탠디 제화 파업
문재인의 약속 불이행

6면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라

2면

마르크스 탄생 200년
오늘날, 왜 마르크스인가

7면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옥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옥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요양병원은 법에서 정한 인력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야간 근무 때마다 제발 불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이 나면 환자 112명이 모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박정수 간호사, 1년차)

“저도 박선옥 간호사처럼 처음 발령받은 곳이 내과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육체적 심리적 압박은 엄청났어요. 1년 미만 신규 간호사의 사직률이 35퍼센트에 이르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 주세요.”(최원영 간호사, 8년차)

“동료 중 누군가 상이라도 당하면 휴일에도 불려 나가야 합니다.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문을 꼭 닫고 있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마음은 뭐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김경희 간호사, 25년차)

발표가 끝난 뒤 이뤄진 질문과 토론에서 유문숙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장은 오늘날 간호 인력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으로 병원들의 '경영 합리화' 정책을 지적했다.

“10여 년 전부터 대형 병원들이 앞장서서 경영 합리화라는 걸 추진했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3월 24일 아산병원 앞에서 열린 집회

요. 핵심은 입원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줄이는 건데요.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해야 하니까 환자들을 24시간 뺨뺨이를 돌려요. 그럼 환자들만 움직이나요? 간호사들과 병원 전체가 훨씬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새벽 2시, 4시에도 검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재원일수는 빠르게 줄었다. 병원의 이윤을 위해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것이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환자 수도 늘었고 병상 수도 급격히 늘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국제적 안전 규제를 일부 도입했지만, 국제 기준을 따라잡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재정 투자 때문에 노동강도만 크게 높아졌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는 이런 형식적 안전 규제가 낳는 결과를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게다가 전공의 수는 지난 몇 해 동안 줄었어요. 그러니 의사들이 하던 일까지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의사

를 대신하는 PA간호사(전문간호사)가 수천 명이나 돼요.” 유문숙 학장의 말이다.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일은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 각종 처치와 약물 투여는 물론, 심전도 검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노동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요컨대, 환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들과 이런 민간병원들에 의료를 내맡겨 온 정부가 문제

를 키운 장본인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자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갖추도록 민간병원들을 강제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한편,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민주노총 산하의 병원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경우 가입이 크게 늘었다. 기존 조합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도부의 지침 없이도 현장 간호사들이 연장근무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움직임은 더 확산돼야 한다.

노동조합 바깥에서도 간호사연대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10년 동안 요구해서 특별법을 얻어냈잖아요.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면 그럴 수 있고, 어쨌든 더 빨리 성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임주현 간호사연대 대표)

5월 12일 세계 간호사의 날을 맞아 박선옥 공동대책위는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노동조건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장호중

축약되지 않은 기사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층짜리 기숙사 하나에 청소 노동자 1명?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는 인력 부족에 병들고 있다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이다. 현재 7층짜리 기숙사 한 동을 청소 노동자 단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는 약 23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E-House)를 신축했다. 학교 당국은 신축 기숙사가 “최첨단”, “친환경 건물”이고 “건축학적으로도 뛰어나”다며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신축 기숙사는 이화여대의 다른 기숙사보다 이용료가 비싸고, 많은 상업 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7층짜리 기숙사 8개 동을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단 10명이다. 이 노동자들은 2년 동안 끔찍한 노동강도에 시달려야 했다. 한 노동자는 “출근하는 게 무서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복도, 계단, 화장실 외에도 신축 기숙사에 딸린 주방,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 학생 2000명이 매일 사용하는 부대시설까지 청소해야 한다(화장실 42개, 새참실(탕비실) 36개, 세미나실 18개, 독서실 8개, 주방 2개,



“청소 유경험자가 와서 하루 일하고 가 버렸을 때 눈치를 찾아야 했는데 우리 몰랐어요”

체력단련실 2개 등). 원래는 세탁소 등 더 많은 부대시설을 청소해야 했는데 이마저도 싸워서 줄인 것이다. 기숙사 입사 시 청소가 미흡한 부분도 노동자들 몫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용역업체 소장은 학교 당국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상업시설 주변과 편의점 앞 휴게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청소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

주중에 일을 다 못 하면 주말 특근을

해야 했다. 당연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한 노동자는 일하다가 머리가 깨졌지만 제대로 된 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런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학교 당국에게 있다. 신축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은 원래 이화여대 구내식당의 직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구내식당을 점차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은 온갖 감언이설로 노동자들에게 신축 기숙사 청소 업무를 신청하라고 설득했다. 인력도 충분히 충원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근무를 시작하자 노동자들은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려야 했다.

“처음 우리가 청소하러 올라갔을 때 행정실에서 30명을 충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해 보고 힘들면 더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딱 목살해 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인원이예요.”

청소 업무를 낯생처음 해 본 노동자들은 적정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 채 죽기 살기로 일해 왔다.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망명으로 하루하루 버텨 왔던 것이다.

최근 서경지부 이대분회가 학교 당국에 인원 충원을 요구했지만 학교 당국은 다른 대학들은 오히려 인원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무시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저임금 간접고용으로 청소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비싼 신축 기숙사 이용료와 상업 시설 임대료로 이익을 얻어 왔다. 적립금 6737억 원(2017년 대학알리미)을 쌓아두고도 인력 충원할 돈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학교 당국은 신축 기숙사가 학생들이 “협동과 배려, 소통과 연대”를 배우는 공간이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당국부터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그 덕목들을 실천수범해야 한다.

이화여대 당국은 즉각 신축 기숙사 청소 노동자 인력을 충원하라.

양효영

축약되지 않은 기사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 ★ **이란 핵협정 파기: 중동은 트럼프의 도박장이 대선 안 된다**
- ★ **국제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 한국의 노동현실을 돌아보며**
- ★ **북·미 협상은 이란 핵협정과 다를까?**
- ★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 ★ **‘기본소득 실험’의 실패? 개혁주의의 실패**
- ...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김문성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울산 북구에서는 부당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을 대신할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러진다.

당연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 선거에서 다시 노동계 단일 후보가 당선하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촛불 계승 운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은커녕 노동 적폐 청산도 경원시해 왔다. 문재인은 최근 금속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돌기를 거부했다. 민주당의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는 보수정치와 노동정치가 번갈아 당선하며 북구를 망쳤다고 주장한다.

현재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진보 후보 간 단일화 투표를 앞두고 있다(5월 10~11일). 울산 북구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했던 정의당 조승수 전 의원과 현대차 노동자 출신인 민중당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후보다.

단일화 방식은 논란 끝에 주민 여론 조사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 투표를 각 50퍼센트씩 반영하기로 했다.

두 후보의 입장과 실천을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점으로 아쉽게도 둘 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무시를 정면으로 비판하지는 않는다. 이는 두 후보가 속한 민중당과 정의당이 모호한 태도를 취해 온 것과 관계 있는 듯하다.

상대적으로 정의당과 조승수 후보가 민주당에 좀 더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 후보는 최근 지역 언론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중당, 정의당이 울산 북구 진보 단일화 협상 타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남북 관계, 적폐 청산 등등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 노동기본권 문제나 … 서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보살피고 복지국가의 틀을 잡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고 우려가 현실화된 지점도 있어 조승수 그리고 정의당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의 보완재 구실을 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민주당과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는 애매하게 이렇게 말했다.

“다른 방식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 방식은 부정 않겠지만 제가 먼저 하자, 어떻게 하자고 할 생각은 없다.”

같은 매체의 인터뷰에서 민중당 권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실망이 커지는 노동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하기를 회피하는 인상이다.

조승수 후보는 독자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정의당 울산시당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주 35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을 핵심 공약

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6년 총선 진보 단일화 경선 때도 조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다.

권오길 후보는 노동 개혁입법을 강조하며 공약들을 여럿 내놓았다. 희망 퇴직 남용 방지법, 감정노동 보호법, 10대 재벌 비정규직 금지법,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등.

노동계 의원과 구청장 등을 여럿 배출한 울산 북구에서 친노동 입법 공약만으로는 차별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것을 실현할 진정한 방법이 중요하다. 대중 투쟁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조 후보는 2016년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이루자고 했다. 권 후보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는 의원이 되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한다.

두 후보 모두 노동계에 기반이 있지만, 구성은 좀 다르다.

조 후보는 현장 투쟁보다는 노동자 양보를 함축하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상층의 온건한 부분을 기반으로 삼는다. 그중 일부는 노사정위원장이 된 문성현과도 연계돼 있다. 이런 온건성은 그가 국가보안법 문제에 매우 나쁜 태도를 취하며, 혁명적 좌파와 친북 좌파에 적대적인 것과 관계 있을 것이다.

권 후보는 조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장 기반을 더 강조하는 듯하다. 민주노총 울산 조합원 4503명이 공개 지지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시절에는 민주노총 파업, 지역 내 연대, 지역 촛불 등의 조직 책임을 무난하게 수행한 걸로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 중심 진보대통합을 “강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분열을 초래할까 봐 다소 우려스럽다.

둘 중 누구라도 자본가 정당들의 후보와 맞붙는 진보 단일 후보가 되면 그에게 비판적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선진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두 후보는 모두 좌파성, 투쟁성이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본선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조승수 후보가 노동자 편에 서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권오길 후보보다 덜 투쟁적이고 더 온건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7년 2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0.9퍼센트를 차지한다.

한부모가구 중 약 42퍼센트가 저소득층이다. 또한 한부모의 절반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다 보니 한부모의 아이들은 “안정적 양육 환경”은커녕 위험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흔하다.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보면, 초등학교 자녀의 약 55퍼센트가 방과 후에 돌봐 주는 어른 없이 혼자 지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한부모들의 조건 개선을 위해 내놓은 것은 보잘것없다. 올해 초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간을 1년 늘리고(자녀 나이 만 13세까지에서 만 14세까지로), 지원금은

자녀 1인당 고작 1만 원 인상했다.(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2인 가족 기준 약 148만 원)의 한부모 지원금은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지원금은 월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런 찜뭉 인상으로는 생계와 양육에 허덕이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증평 모녀 자살 사건의 비극

최근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 사건은 생활고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4년 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엄마가 팔을 다쳐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운운하며 떠돌아 댔지만,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처지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각종 재산과 여

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하다 보니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부모가족 중 정부 지원금을 받는 가족은 고작 8퍼센트 수준이다.

가난을 입증해야 쥐꼬리만 한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보니, 한부모가족 지원 단체에서는 정부 기관 상담을 받을 때, ‘허름한 옷을 입고 불쌍하게 보여야 한다고 조언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조금 늘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여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은 ‘지원금 몇 푼 받으려고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들에게 모멸감을 안겨 준다. 또한 세금을 축내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부추기는 자양분이 된다.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

돌봄과 양육의 사회화

한국의 아동·가족 복지 공공지출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인 GDP 대비 1.1퍼센트에 불과하다. 보육 지출을 제외하면 고작 0.2퍼센트이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보건복지부)

자본주의에서 대다수 가족은 자본가들에게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 지배자들은 양육·가사 등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개별 노동계급 가족에게 떠넘겨 이득을 취해 왔다.

어떤 가족이든 노동자들은 높은 양육비 부담에 짓눌린다. 가정에서 소비하는 한 달 평균 육아비용은 107만 원 수준으로 가계 지출의 31퍼센트를 차지한다. 10명 중 9명의 부모가 육아비가 부담된다고 했다. (2016 육아문화인식조사, 여성가족부)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정책을 20대 국정전략 과제로 선정했지만,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히트 앤 런 방지

법’ 국민 청원에 호응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지만, 이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부 미혼모들에게는 개선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기만적이게도 가족 생계에 직결되는 고용과 임금 개혁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눈곱만큼 실행하고, 산입범위 확대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뒤집고 단계적 부양의무 완화 정책을 내놔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육비, 주거비 등 여러 복지가 보편적으로 대폭 확대돼야 하고 노동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어야 한다.

전주현



조영준 기자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포장만 화려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자회사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4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고착화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발전소의 중요 업무 중 다수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한다. 우리도 생산의 주체다. 그리고 우리 업무에 대해 발전회사가 직접 지시한다.

지난 20년 동안 발전소 업무의 민간 개방(민영화)을 확대해 왔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정부 지침(‘민간의 고도의 전문성’)을 근거로 우리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려 한다.

말이 안 된다. 전문성이 중요한 일이라면 입찰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입찰 경쟁 확대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이다.”



박인국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인천기지지회 지회장

“지난해 9월 가스공사 비정규직 7개 직종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예외 없이 정규직이 되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협의 중이지만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파견직 일부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며 ‘자택 대기’ 중이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는 투쟁 기금 모금 찬반투표를 했고 82퍼센트 지지로 통과됐다. 우리의 요구를 온전하게 얻기 위해서는 파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종국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전산지부장

“가스공사 전산 직종 비정규직은 80여 명이다. 사측은 선례가 없다며 전산 직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는 전산 직종이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스공사에서는 싸워서 얻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뷰·정리 유병규·이재환·신정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 교사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배제 이유로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기간제 교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온 정부에 있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을 가혹한 경쟁으로 내 몬 주범도 정부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 채우는 개선하

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돌아온 것은 해고 확대였다. 장기 근속한 기간제 교사들을 해고하거나, 4년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신규 채용하겠다고 기간제 교사들을 해고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해고 사태가 “기간제 교사가 상시·지속업무라는 근거를 없애기 위한 의도”라며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월 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에서도 교사 정원 감축을 예고했다.

전체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 손쉽게 늘였다 줄일 수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처우 등 조건도 악화할 수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정규직화와 해고 반대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했다.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하는 한편 5월 12일에는 노조 설립 후 첫 집회도 연다.

기간제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명지



조영준 기자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한국잡월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이 자회사 고용 방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잡월드는 하루에 3000명, 2012년 설립 이후 누적 49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은 국립 직업체험관이다. 유명한 수학여행 코스이기도 하다.

잡월드의 실상은 “비정규직 월드”다. 정규직은 고작 50명뿐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338명이 7개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다.

잡월드는 공공기관 중 간접고용 비

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는데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기도 하다.

그런데 잡월드는 간접고용 ‘정규직화’ 정책의 온갖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노사전문가협의체에 전환 결정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노사전문가협의체는 강사 직종의 의견을 무시하고 4월 3일 자회사 고용을 결정했다.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은 이를 비판했다. “자회사는 처우 개선도, 고용 안정도 되지 않습니다. 용역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에 불과합니다.”

강사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4월 1일 노조를 결성했다. 사측의 방해가 있었지만 강사 275명 중 153명이 노조로 가입했다.

재계약 불안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관리자들의 온갖 횡포를 참아 온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을 계기로 직고용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라는 열망이 크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자회사 방안이 관철되면, 민간 부문에도 악영향을 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강철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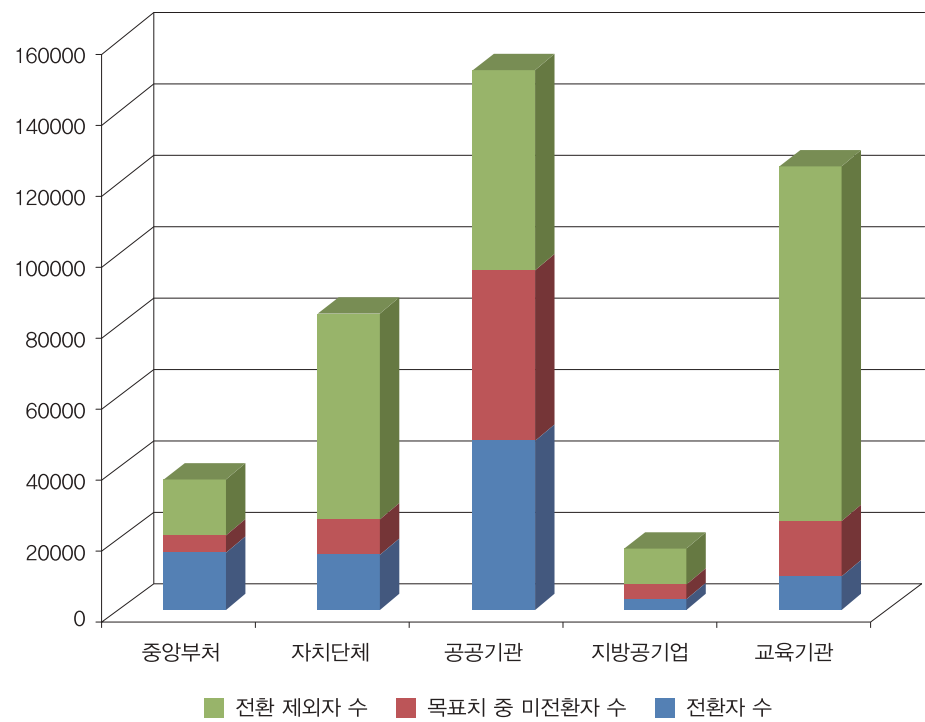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특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줬고,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7.5퍼센트만이 전환 결정됐다. 기간제 교·강사 전부, 지자체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노동자 상당수가 전환에서 제외됐거나 그렇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표 참고)

전환 방식도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고용이 대다수라 차별과 열악한 처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인 ‘표준임금모델’도 내놓았는데,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시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 무색케 한 인천공항 모델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대폭 누락되고, 전환 방식도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중규직화’ 정도라고 평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자체의 의미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5월 9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선언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폭로했다.

용역 회사 계약 종료는 진전이 없어 전환이 지연되고 있고, 무엇보다 임금과 처우 개선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정부가 내놓은 ‘표준임금모델’을 명분으로 애초 합의보다 더 형편없는 처우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공공운수노조 지도

부는 인천공항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로 언급하기도 한다. 인천공항 사측이 처음 내놓았던 것보다 직접고용 규모가 늘었고, 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자회사 노동자들의 조건을 직접고용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하기로 한 합의 등을 근거로 말이다.

그러나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공항 사측도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동일 처우를 보장할지 그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들도 공공기관이지만, 그곳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며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투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천공항 사례가 다른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에 기준선이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 대다수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고용하려 하고 있다.

인천공항 모델을 자회사의 문제점을 보완한 사례라고 본다면, 자칫 자회사 전환 시도에 무기력할 수 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모델(안)’에는 인천공항에서 합의된 보완책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방식의 자회사 전환이 노동자들의 바람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철도·발전 등에서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해야 한다.

정규직화 반대 논란에 원칙 있게 대처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 돌아볼 또 다른 이슈는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태도다.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보수적인 조합원들을 추수하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반대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 것, 전교조 지도부가 기간제 교·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 것 등이 그런 사례다.

그런데 최근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서울 지하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긍정적

으로(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사례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사측은 정규직화를 하되 별도의 직급을 만들어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는 안을 제시했다.

유감스럽게도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는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적인 조합원들의 압박을 추수해, 정규직 전환자들에게 차별을 두는 방안에 합의해 왔다.

최근 철도노조 내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철도노조가 서울지하철, 전교조 등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장의 투사들이 원칙 있게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조직하고 확대해야 한다.

곧 발표될 2단계 정규직 전환

정부는 5월 중에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6월부터 전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 전환 대상 기관의 92퍼센트는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은 1단계 전환에서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가장 미온적이었고, 온갖 핑계를 부렸다.

1단계 전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2단계 전환에서도 대규모 전환 제외와 ‘무늬만’ 정규직화, 처우 개선 미비 등이 나타

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적극 연대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층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황은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중요한 노동 정책을 공공부문부터 관찰하고 전체로 확산하려 해 왔다.

실제 자회사 고용 방안은 곧바로 파riba게트, SK브로드밴드 같은 민간 대기업들로 이어졌다. 대기업 사용자들은 ‘표준임금모델’도 비정규직 임금의 기준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동운동 전체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정원

» 기사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건 악화 말고
인력 충원하라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중 무휴 공공·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스·철도·공항·방역 등 공공기관들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 대체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를 내려면 인력이 대폭 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공부문 사측은 교대제 개편 등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방식으로 인력 충원 없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최근 인천공항 승객보안검색 분야 협력업체들은 현행 3조 2교대제를 12조 8교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1900여 명이 속한 승객보안검색 하청업체 세 곳이 모두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두 업체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으로 주당 노동시간은 약간 줄어든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여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조건을 크게 악화시킨다.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되, 1일 노동시간을 대폭 늘리는 꼴수를 부렸다.

12조 8교대가 시행되면, 노동자들은 기존의 야간 장시간 근무에 더해 주간근무에서도 이를 연속으로 무려 13시간씩을 꼬박 일하게 된다(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게다가 노동자들이 오전 6시까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영종도로 출근하려면 새벽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훨씬 복잡해진 교대제로 인해 출·퇴근 시간도 매일 달라진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신체 리듬을 깨뜨리고 안정적으로 삶을 계획하기가 어렵게 만들 것이다. 기존에 주간근무만 하던 일부 노동자들은 새롭게 야간근무에 투입되게 생겼다.

인력 충원 없는 교대제 개편은 사용자들이 비용은 절감하며 노동 시간을 줄이는 데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서울지하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4조 2교대 시범 실시도 그런 사례다. 3조 2교대와 비교해 야간 노동일이 줄었지만, 인력 충원 없이 교대제를 변경해 노동강도가 강화됐다.

임금 삭감

정부는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며 탄력정원제를 도입해 임금도 삭감하려 한다.

탄력정원제는 기존 직원들의 시간의 노동을 억제하고 연차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그렇게 줄어든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깎고, 그 재원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노동 억제와 연차 촉진으로 266개 공공기관에서 총원 가능한 인력 규모는 1만 8105명~1만 3903명 수준이다(정부의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이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단순 계산했을 때, 개별 공공기관 평균 고작 50~60명이 충원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상당히 억제돼 왔는데, 또다시 임금을 줄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울 것이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강도 강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으로 조건이 후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옹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시도되는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투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 내 논란을 빚어 온 쟁점들에 원칙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일부 노조 지도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나, 임금 삭감이 목적인 탄력근무제를 일부 용인해 온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결집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정원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오늘날, 왜 마르크스인가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위대한 혁명가가 남긴 여전히 유효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

카를 마르크스가 1883년 3월 세상을 떠났을 때 여기에 주목한 이는 많지 않았다. 런던 하이게이트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10여 명이 참석했다.

마르크스는 1871년 파리로뮌을 옹호한 일로 유럽 언론에 마녀사냥을 당한 바 있지만, [영국 언론] <더 타임즈>는 프랑스 기사를 통해서야 그의 죽음을 알았다.

그후로도 마르크스는 상징적으로 여러 차례 다시 묻혔다. 사회학자 다니얼 벨은 냉전 시기에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주창했는데, 그는 이 말을 무엇보다 마르크스주의의 종말이란 의미로 사용했다.

1989년 동유럽과 러시아의 스탈린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미국 국무부 관료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더 나아가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적수를 물리치고 승리했고, 미래도 지배할 것이란 얘기였다.

그럼에도 5월 5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은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고 많은 행사가 열렸다.

심지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영풍한 짓을 자주 한다)는 마르크스의 고향 트리어에서 열린 마르크스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대체 왜 이렇게 마르크스를 물어 버리기 어려운 것일까? 근본적 답은, 자본주의 때문이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은,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선도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거만함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서방에서 계급 문제는 사실 성공적으로 해결됐다. 현대 미국의 평등주의는 마르크스가 꿈꾸던 계급 없는 사회의 핵심을 이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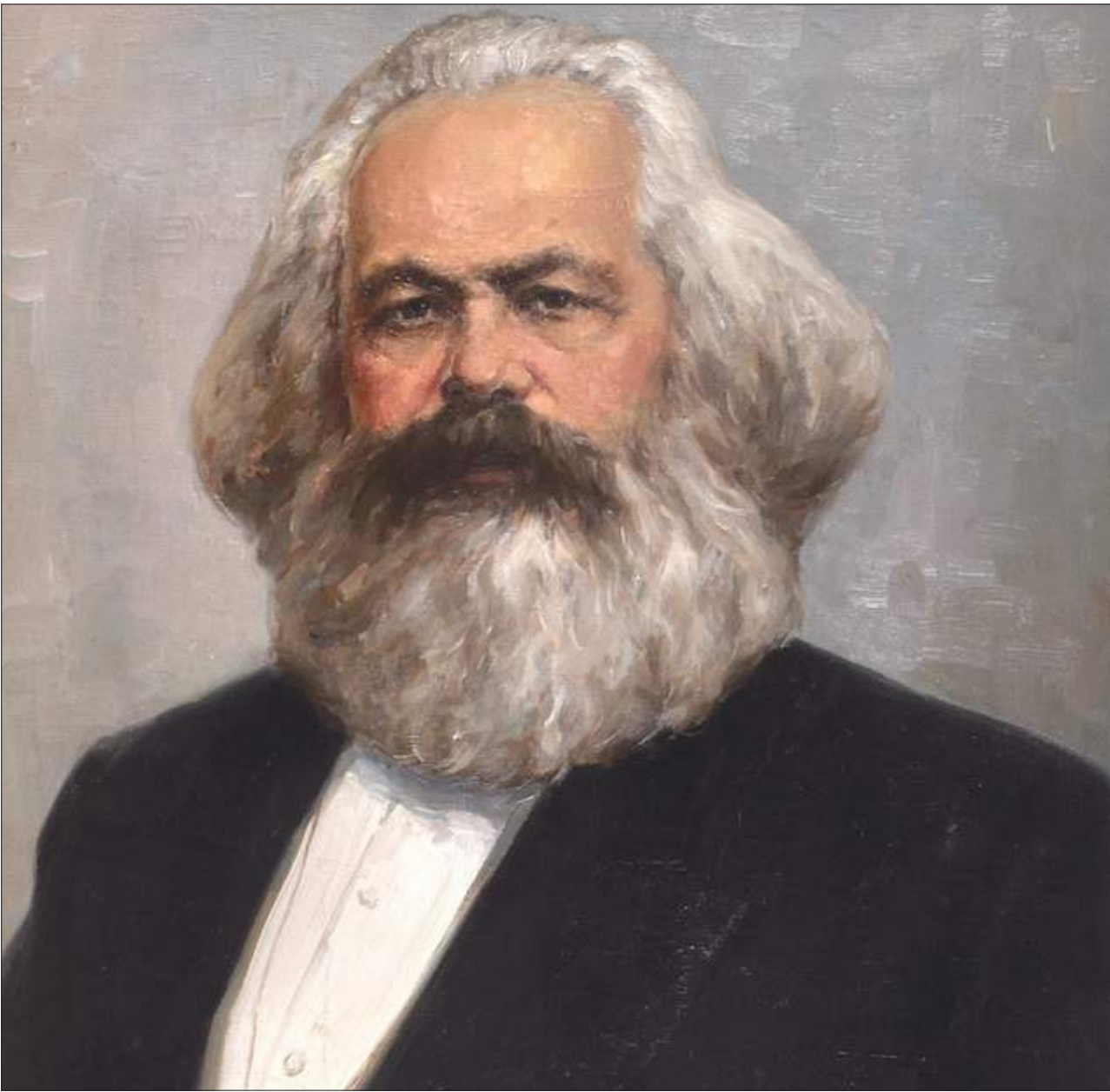
후쿠야마의 말은 이제 허황된 소리가 됐다. 미국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은 한 세대 내내 침체된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제적 불평등은 증가했고, 토마 피케티의 연구에 따르면, 제1차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서방 정치권에서 득세하며 신자유주의를 추종한 “극단적 중도” 세력은 이제 좌와 우 양측에서 일어난 소위 “포퓰리즘”의 반란에 직면했다.

이 모든 문제는 자본주의가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는 [2008년에 닥친]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 자본주의를 연구했다.

마르크스가 나중에 언급한 바에 따르면, 1840년대 독일의 젊은 급진적 민주주의자였던 그는 “이른바 물질적 이해관계를 놓고 논쟁을 벌여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경제 분석뿐 아니라, 여성차별 등 각종 차별과 지정학적 갈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서도 유용하다

그는 위대한 현대 혁명(1640년 영국 혁명, 1776년 미국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협소한 정치적 변화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가 “인간 해방”이라 불렀던 변혁을 이루려면, “삶의 물질적 조건” 또는 철학자 헤겔이 말한 “시민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마르크스는 또한 “시민사회의 해부도는 정치경제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르크스는 고전 정치경제학(제임스 스튜어트,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을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이후 자신이 ‘정치경제학 비판’이라 부른 작업으로 나아갔다.

그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단지 정치경제학을 이론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 일부 설명하는 동시에 신비화하는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나아갔다. 바로 그 체제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 불렀다.

그는 자신의 걸작 《자본론》에서 현대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비판을 발전시켰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당시에만 해도, 자본주의 체제는 몇 개의 교두보(영국, 북서유럽 일부 지역, 미국 북동부 해안 지역)만을 구축한 상태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를 정복하리란 것을 간파했다.

마르크스는 가장 유명한 저작 《공산

당 선언》에서 자본주의를 거의 찬양하는 듯 말했다. “생산의 끊임없는 변혁, 모든 사회 상태들의 부단한 동요, 영원한 불확실성과 격동은 부르주아 시대를 이전의 모든 시대와 구별하는 것대다.”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 쓴 자본주의에 대한 묘사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에 잘 들어맞는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부르주아는 세계시장을 통해 모든 국가의 생산과 소비에 범세계적 성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이렇게 작동케 하는 근본 원리를 밝힌 마르크스의 작품은 《자본론》이다.

속박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상품”이란 장으로 시작한다. 이를 얼핏 보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시장과 동일시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에 동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시장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는 속박과 착취가 지배하는 왕국이다.

자본주의 기업들이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이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능력에 따라 생존·번영한다.

이 말은 기업들이 경쟁 논리에 따라 운영된다는 뜻이다. 자본가들은 “싸우는 형제들”처럼 서로를 약화시키고, 상대의 시장을 훔치고, 필요하다면 상

대를 망하도록 하려 한다.

이 생사를 건 싸움에서 승리의 잣대는 이윤이다. 마르크스는 스미스와 리카도의 연구를 더 발전시켜, 자본가가 상품을 만들려고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에서 이윤이 생긴다는 점을 드러냈다.

마르크스가 “은밀한 장소”라고 부른 생산 영역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해 최대한의 이윤을 뜯어낸다.

노동자들은 사용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지적했듯, 노동자가 가진 것은 오직 노동력뿐이라서 그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착취당하는 것이다.

《자본론》의 가장 뛰어난 부분 중 하나는 자본주의 생산 조건이 갖춰지면 서 농민이 토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농민들은 노동자가 됐고, 유럽은 점령, 약탈, 노예화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

자본주의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체제다. 자본가들은 생존하려면 착취해야 할 뿐 아니라, 이윤을 축적해 더 크고 효율적인 생산에 재투자해야 한다.

바로 이 원리가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찬양한 역동성과 동요를 가져오는 것이다.

경쟁적 축적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위기도 낳

는다.

기업은 점점 더 많이 노동 절약형 기술에 투자하고, 이는 이윤율을 저하시켜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반란도 증가한다. 이 계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육받고, 단결하고, 조직된다. 바로 자본주의 생산 과정 작동 방식에 의해서 말이다.”(마르크스)

분열

자본주의는 생산에서 협력을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생산을 실제로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착취하려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맞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단결은 노동계급이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는 또한 자본주의의 대안인 공산주의의 기초이기도 하다. 공산주의는 “연합한 생산자들”이 운영하는 사회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생산과 사회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스탈린주의의 왜곡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전복을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과정으로 여겼다.

1864~1872년 마르크스가 이끈 제1인터내셔널은 이렇게 선언했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인터내셔널은, 노동자들이 분열돼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에도 대처해야 했다.

1870년 마르크스는 “토종” 영국 노동자와 아일랜드계 이주노동자 사이의 인종적 적대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분열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영국 노동계급이 잘 조직돼 있음에도 무력한 이유이다. ... 자본가계급이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의 사상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단지 그의 자본주의 비판 때문만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로 나아갈 길은 노동자의 단결을 통해서 사용자와, 분열을 조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에 맞서는 데 있음을 이해했다.

마르크스는 죽기 얼마 전 켄트 램스게이트에서 쉬면서 미국 언론인 존 스윈튼과 인터뷰를 했다.

스윈튼은 이렇게 적는다.

“나는 이 혁명가이자 철학자에게 숙명적인 질문을 던졌다. [존재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포효하는 바다와 해변을 떠도는 사람들이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의 마음이 잠시 요동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마르크스는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투쟁이죠!”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02호 / 번역 최병현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강동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시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에 불과하다. 국공립 시설조차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90퍼센트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산업적 목표에 따라, 시장 확대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시장 경쟁이 서비스 효율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니라, 재정 지원이나 소극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책임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시장의 효율'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리 사업자들이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악화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이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돈 되는 분야에만 민간 사업자들이 몰리는 공급 불균형 문제도 발생했고, 수익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온갖 불법·부당행위까지 하면서 노동자들의 조건과 서비스 질



강동훈

또 말 바꾸기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국가 책임을 줄이려 한다. 2018년 세계 노동절 대회

의 악화가 심화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려고 출생신고와 함께 대기 신청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민간 시설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바란다. 이런 상황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기존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국공립 시설을 새로 만들고 민간 시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 40퍼센트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은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 중 34만 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드는 것이고, 이 중 17만 개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공약을 반영해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포함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이 실행됐다면,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효

과를 났을 것이다. 물론 상당수 시설들이 여전히 민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민간 시설들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겠지만, 비중이 확대된 국공립 시설들이 사회서비스의 기준 구실을 하면서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과 그곳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책임 회피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후퇴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관련 법안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바뀌 설립하려 한다는 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다. 정부가 극구 '공단'이라는 명칭을 거부한 것은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5월 4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결국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내용도 명칭을 따라 후퇴했다. 공공 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과 이에 걸맞는 예산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앞으로 5년간 공공 시설 1837곳을 신축하는 것을 포함해 시설 3400곳을 직영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7만 4163개를 만든다. 전국에 어린이집만 4만 3000곳이 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시설이 3400곳밖에 안 될 뿐 아니라, 애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일자리 17만 개를 늘린다는 계획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종류와 범위 등을 지자체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올 공산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려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 법안에서는 독립채산제가 빠졌지만, 여전히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경영 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수익성 위주로 운영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정부가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려 하면서 생기는 것들이다.

게다가 보육, 요양 등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예를 들어, 한 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51개 단체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반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역시 공공 시설 확대가 "민간 복지서비스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도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우수한" 민간 위탁 사업자에게는 공공 시설을 계속 위탁할 수 있다고 열어두기도 했다. 이런 압박들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누더기가 될 공산도 크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노동자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만 질 좋은 공공 서비스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마시즘 2018

7월 19일(목) ~ 22일(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나홀간의 토론의 장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노동자들과 청년·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

참가신청·문의 **marxis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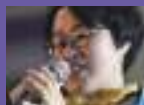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해외연사 **로라 마일스**
영국 대학노조 활동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트랜스여성



김진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박춘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안영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서울본부
수석본부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두식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서재유
민주노총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워크
지부장



최승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김정호**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교육 강사
김정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분과장 대표 **정진희** 젠더외계급연구회 상임연구원
이정규 한신대 강사 등

제국주의와 한반도 주변 정세, 노동운동, 문재인 정부와 한국 정치, 마르크스 탄생 200년,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 중국, 한국 현대사와 민중 저항사, 교육, 심리학, 종교 등을 주제로 70여 개의 워크숍이 열립니다.
웹사이트(marxism.or.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